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기출문제(2017.4.8 시행)〉

<출제 비중>

제1편 행정학총론	3문항	제5편 재무행정론	2문항
제2편 정책론	4문항	제6편 행정환류론	
제3편 조직론	4문항	제7편 지방행정론	2문항
제4편 인사행정론	5문항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은 평이하게 출제된 편이었습니다. 대부분 강의와 교재에서 강조한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출제라면 90점 이상은 받아야지 좋은 점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경향이라면 이론과 실제 행정기관을 연결시키는 문제가 3문항 정도(문5의 정부업무 평가기본법에 관한 문제, 문8의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 문19의 공공기관유형 사례문제)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기관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강의와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정도는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문11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워낙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특강과 문제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국가직 시험은 뒤로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지방직 시험에 집중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후회없는 70일을 보내고 반드시 합격의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②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 ③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인종 · 종교 · 성별 · 직업 · 신분 ·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으로부터 인 구비례(사회구성)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① [X]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2017 비전행정학 p.777

[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효율성 강조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 ㄹ. 고객중심의 행정
- ㅁ. 기업식 정부 운영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ㄹ, ㅁ

정답> ③

해설> 신행정론(신행정학)이란 '기존 행정이론(특히 행태론)의 실천성 · 적실성 결여 문제를 극복하고 행정이 사회적 적실성(relevance)과 실천성(action)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를 규명한 이론'을 말한다.

③ ㄷ, ㄹ은 옳은 내용이고, ㄱ, ㄴ, ㅁ은 옳지 못한 내용이다.

ㄱ. [X] 신행정론은 종래 행정이론의 가치중립적 입장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외계층(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을 중시하였다.

ㄴ. [X] 신행정론은 가치중립적 · 보수적인 행태론이나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고 가치지향적인 현상학적 접근을 강조한다.

ㄷ. [O] 신행정론은 현실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는 사회적 적실성 및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성을 강조한다.

ㄹ. [O] 신행정론은 행정권의 종국적 근원을 시민으로 보고, 시민참여 · 수익자에 의한 평가 · 관료제의 대표성 등 고객의 참여를 강조한다(고객지향주의).

ㅁ. [X] 기업식 정부 운영은 신행정론(NPA)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NPM)에서 강조하였다.

▶ 2017 비전행정학 p.97

[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 ②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옥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 ③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정답> ④

해설> ④ [X] 법규와 절차의 준수는 비정의성(非情誼性, impersonalism)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관료제의 역기능(병폐)
(1) 동조과잉(→ 목표전환) 관료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인 규칙 · 절차에 지나치게 영합 ·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는 목표전환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Merton), 부하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통제위주의 관리를 가져

올 수 있다(Gouldner).

(2) 번문옥례(繁文縟禮, Red Tape) · 형식주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는 문서다작주의(Red Tape) · 형식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3) 인간성의 상실(인격의 상실)

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법규우선주의, 그리고 몰인격적(impersonal) 역할관계는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저해하며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한다.

(4) 전문화로 인한 무능

전문행정가는 이른바 훈련된 무능현상(Trained Incapacity, 한 가지의 지식 또는 기술에 관하여 훈련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은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시야가 좁아져 포괄적인 통찰력이 부족하게 되고, 할거주의나 국지주의를 초래하기 쉽다.

(5) 무사안일주의와 상급자의 권위에 의존

계층제에 의한 지휘 · 명령에 의존하게 되어 문제해결에 적극적 · 선행적 태도를 갖지 못하고, 상급자의 권위나 선례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6) 할거주의(割據主義, 국지주의)

관료들이 자기의 소속기관·소속부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횡적인 조정·협조가 곤란해질 수 있다. 셀즈닉(P. Selznick)은 관료제가 분업과 권한위임으로 인해 할거주의가 발생하며, 조직전체의 성취도는 낮아지고 외부환경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7) 변동에 대한 저항

관료들은 자기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본질적으로 보수주의적 · 현상유지적 특징을 나타내고 변동에 대한 적응력이 결여될 수 있다(Bennis).

(8) 관료독선주의

직업관료는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독선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

(9) 민주성 · 대표성의 제약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력이 약화되면 행정의 자율성이 지나쳐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관료제의 대표성 · 민주성을 저해할 수 있다.

(10) 무능력자의 승진(Peter의 법칙)

피터(Peter)의 법칙은 관료제의 규모가 커지면 승진의 기회가 확대되고 무능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조직의 능률이 저하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즉, 되풀이되는 승진으로 공무원이 무능력수준까지 승진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직의 팽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1) 관료제국주의(Parkinson의 법칙)

파킨슨(Parkinson)의 법칙은 관료제는 자기보존 및 세력 확장을 도모하려 하기 때문에 그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기구와 인력을 증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관료제는 권한행사의 영역을

계속 확장하려 하는데, 이를 '관료제의 제국주의'라고도 한다.

(11) 기 타

- ① 권위주의적인 행태의 조장 : 권한과 능력의 괴리, 상위직으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업적평가기준, 조직의 공식적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조직구성원들이 불안해지므로 더욱 더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가지게 된다(Blau & Thompson).
- ② 권력구조의 이원화 : 상관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원화됨에 따라 조직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조직구성원들의 불만이 증대된다.

▶ 2017 비전행정학 p.573, 575

[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 ② 인력 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 ③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④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정답> ③

해설> ③ [X] 계급제는 폐쇄형의 충원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외부전문인력의 충원이 곤란하여 신진대사가 용이하지 않고 행정의 전문화가 저해된다. 또한 계급제에서 강조하는 일반행정가주의도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계급제(階級制)의 장 · 단점>

장 점	단 점
(1) 인사배치의 신축성 · 융통성 확보 계급만 동일하면 보수액의 변동없이 전직 · 전보가 가능하므로 융통성이 높고, 적재적소의 인사배치가 가능하다. (2) 행정조정의 원활화 계급제 하에서는 수평적 보직이동이 촉진되므로 부서 간 · 부처 간 협조와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이에 비해 직위분류제 하에서는 고도의 전문화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3) 일반행정가의 양성 공직이 세분화되지 않으므로 일반적 교양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다양한 경력을 쌓도록 함으로써 일반행정가 양성에 기여한다. (4) 신분보장의 강화 계급제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기구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신분보장이 강화되어 안정감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행정의 전문성 저해 폐쇄형의 충원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외부전문인력의 충원이 곤란하여 신진대사가 용이하지 않고 행정의 전문화가 저해된다. 또한 일반행정가주의도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2) 행정의 민주적 통제의 곤란 신분보장의 강화는 무사안일과 특권집단화를 초래하여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한다. (3) 권한과 책임의 불명확 사람중심의 분류이기 때문에 직무내용이 명확하지 못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해진다. 직위간의 직무경계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많다. (4) 직무급 체계의 확립 곤란 계급이 보수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보수라는 직무급 체계의 확립이 곤란하여 공정한 보수체계의 확립

(5)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 폐쇄적 충원체제인 계급제하에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되고 장기적 능력발전에 이바지하여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한다. (6) 안목의 확대와 창의력 계발 횡적이동의 활성화로 폭넓은 안목 확보가 용이하여 상위직에 적합하다. (7) 경력발전의 용이성 신분이 보장되고 폐쇄형의 충원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다.	이 곤란하다. (5) 공직의 경직성 폐쇄형으로 인한 외부사회와의 단절 및 환경에의 대응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 2017 비전행정학 p.801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위원장이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정답> ③

해설> ③ [X]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동법 시행령 제18조).

- ① [O] 김포시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므로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 ② [O] 관세청장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부 · 처 · 청)의 장이므로 자체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 ④ [O]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 ·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 ·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가.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①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 2017 비전행정학 p.455

[6]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O]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집행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술(記述, description)하고 설명하는 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집행현장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① [X] 사바티어(Sabatier)는 처음에 하향적 접근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정책지지연합모형은 기본적으로 상향적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적 접근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을 결합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통합모형이다.

②④ [X]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며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방법의 특징이다.

<고전적(하향적) 집행과 현대적(상향적) 집행의 비교>

구 분	고전적·하향적 집행(Top-Down)	현대적·상향적 집행(Bottom-Up)
-----	----------------------	-----------------------

① 정책상황	안정적·구조화된 상황	유동적·동태화된 상황
② 정책목표 수정	목표가 명확하여 수정 필요성 적음	수정 필요성 높음
③ 결정과 집행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이원론)	결정과 집행의 통합(일원론)
④ 관리자의 참여	참여제한, 충실한 집행이 중요시됨	참여 필요
⑤ 집행자의 재량	집행자의 재량 불인정	집행관료의 재량권 인정
⑥ 정책평가의 기준	집행의 충실성과 성과 중시	환경에의 적응성 중시
⑦ 집행의 성공요건	결정자의 리더십	집행관료의 재량권

▶ 2017 비전행정학 p.411

[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과 유사하다.
- ②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 ③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론으로 분류된다.
- ④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①

해설> ① [X]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동기유발과 관련된 요인에는 불만 요인과 만족요인이 있는데 이들 요인은 서로 독립된 별개라는 입장이다. 인간은 이원적 욕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욕구는 불만과 만족의 감정에 대하여 별개의 차원에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욕구를 계층화하고 계층에 따라 욕구의 발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은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론과 앨더퍼(Alderfer)의 ERG 이론이다.

▶ 2017 비전행정학 p.507

[8]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④

해설> ④ [O] 특허청은 최초이자 유일한 중앙책임운영기관이다.

- ① [X] 감사원은 「헌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 ② [X]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한다.
- ③ [X]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2017 비전행정학 p.607, 1105, 795

[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정답> ③

해설> ③ [O]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을 초월한 도덕적 · 규범적 · 선형적으로 존재한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① [X]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보는 것은 과정설이다.
- ② [X]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등은 실체설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이다.
- ④ [X]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은 실체설이다.

▶ 2017 비전행정학 p.205

[10] 전략적 인적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적이며 목표 · 성과 중심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한다.
- ②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③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 ④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정답> ②

해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HRM : Human Resources Management)는 인적 자원이 목표달성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인적 자원을 조직의 주요한 자산이자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 ② [X] 개인의 욕구를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조직 목표와 개인목표의 조화 및 통합을 강조한다.

<전통적 인사관리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구 분	전통적 인사관리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이론적 배경	과학적 관리론	후기인간관계론
주된 관심	조직의 성과(생산성) 향상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행복 조화(근무생활의 질 중시)
구성원에 대한 인식	비용(cost), 통제대상	자원(resources), 자산
관리 전략	교환형 관리	통합형 관리
주요 특징	· 하향적 · 집권적 관리 · 규칙과 절차 중시 · 경직적 · X이론과 통제	· 상향적 · 분권적 관리 · 성과와 책임 중시 · 신축성 · 융통성 · Y이론과 참여

▶ 2017 비전행정학 p.783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각급 학교의 입학 · 성적 ·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 조작하도록

록 하는 행위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④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정답> ②

해설> ② [X]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항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2017 비전행정학 p.938/2N2 서브노트 p.137/족집게 특강 p.253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 ③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정답> ④

해설> ④ [O] 무의사결정(Non - Decision Making)은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의도적인 무결정'을 의미한다.

- ① [X] 정책의제설정에서 지배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사회문제는 정책의제화되지 않는다.
- ② [X] 무의사결정은 신엘리트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 ③ [X]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 2017 비전행정학 p.308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증모형 -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 ② 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혼합주사모형 -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을 따른다.
- ④ 쓰레기통모형 -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정답> ②

해설> ② [X] 드로어(Y. Dror)의 최적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과 같은 초합리성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한다.

▶ 2017 비전행정학 p.357

[1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간 퇴직 전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 |
|------|----|
| ㉠ | ㉡ |
| ① 3년 | 5년 |
| ② 5년 | 3년 |
| ③ 2년 | 3년 |
| ④ 2년 | 5년 |

정답> ①

해설> ① [O]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관련 규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7 비전행정학 p.936

[1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쉬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해설> ② [X] 반대로 설명되어 있다. 계획예산제도(PPBS)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조건을 먼저 고려하여 매년 '0'(zero)의 기준에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제도이다.

▶ 2017 비전행정학 p.1035, 1041

[1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④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X]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2017 비전행정학 p.1210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 ②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 ③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 ④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X]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에 자치구와 군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와 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설치 등)

-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 2017 비전행정학 p.1244

[1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도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①

해설> ① [X] X-비효율성은 자원배분상태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잘 알 수 없는 요인에 의한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이 경쟁체제에 노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실패의 주원인이 된다.

▶ 2017 비전행정학 p.246

[19]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방송공사
- ②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연구재단
-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소비자원

정답> ④

해설> ④ [O] 한국소비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 ① [X]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방송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지만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 ② [X]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 ③ [X]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구분(2017년 4월 현재)>

공 기 업 (35)	시장형 (14)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21)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 정 부 기 관 (87)	기금관리형 (16)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위탁집행형 (73)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연구재단 등
기타공공기관(208)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 2017 비전행정학 p.599

[2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

정답> ①

해설> ① [X]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전적 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5회계연도 이상에 해당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재정상 중앙통제 유형>

예산편성지침제도	지방채발행승인제도	재정투융자심사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진단제도
권력적 통제		비권력적 통제		
사전적 통제				사후적 통제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17 비전행정학 p.1223